

## 229-1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국가에 속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으며, 국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는 인간 이상의 존재(신)이거나 인간 이하의 존재(짐승)일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 26 수능특강 83쪽 <자료 플러스>

아리스토텔레스 제시문 中 : 공동체 안에서 살 수 없거나, 자급자족하여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자는 국가의 부분이 아니며, 짐승이거나 신일 것이다.

## 229-6

맹자라고 해서 군주가 자국보다 타국을 우선하여 사랑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맹자는 나와 가장 친한 사이부터 친하지 않은 사이까지 사랑을 확장해 나가는 차별적 사랑을 주장하며, 따라서 군주는 타국보다는 자국을 우선하여 사랑해야 한다고 봅니다.

## 229-8

한비자는 인간의 본성이 이기적이라고 보며, 그러한 이기적 본성은 도덕적 교화가 불가능하므로 군주는 적절한 포상과 처벌을 통해 백성의 이기적 본성을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때 인간의 본성이 이기적이라고 보는 것은 한비자와 순자의 공통점이지만, 것처럼 악한 본성이 교화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한비자와 순자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230-3

로크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오류를 저지를 수 있는 존재입니다. 즉 오류 가능성이 있는 존재입니다.

## 230-4, 230-6

홉스에 따르면 자연 상태에는 소유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의와 부정의의 관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홉스는 정의라는 것은 결국에는 유효한 계약을 지키는 것이며, 이때 계약의 유효성은 강제력(국가 권력)의 수립에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홉스는 오직 국가 권력이 확립된 사회 상태부터 정의와 부정의의 관념이 존재하게 된다고 봅니다.

### 26 수능특강 84쪽 <자료 플러스>

홉스 제시문 中 : 어떤 강제력, 즉 코먼웰스(국가)가 없는 곳에는 소유권도 없고 부정의도 없다. 만인이 만물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의의 본질은 유효한 계약을 지키는 데 있으며, 계약의 유효성은 그 계약의 이행을 충분히 강제할 수 있는 사회적 권력의 수립과 더불어 시작된다.

### 26 수능특강 정답과 해설 27쪽 5번 문항

② 홉스는 자연 상태에서는 정의와 불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홉스에 따르면 정의와 불의는 공통의 권력이 수립된 이후에 존재하게 된다.

### 23 수능 12번 문항

ㄷ. 홉스 : 개인은 자연 상태에서의 불의를 피하려고 계약을 맺는다. (X)

## 230-8

홉스와 루소 모두 사회 계약이 모든 사회 계약 주체의 힘과 의지를 하나로 결합한다고 주장합니다. 다만 홉스는 그렇게 결합한 힘과 의지가 절대 군주에게 부여된다고 보고, 반면 루소는 그렇게 결합한 힘과 의지가 모든 사람의 공통된 의지로서의 일반 의지의 지배 아래 있게 된다고 봅니다.

### 26 9월 모의평가 19번 문항

ㄴ. B : 사회 계약은 계약 주체 모두의 힘과 의지를 하나로 결집한다. (O) (단, B는 홉스와 루소의 공통 입장이다.)

## 231-5

루소는 모든 개인이 사회 계약을 통해 사적 의지가 아닌 공적 의지, 즉 일반 의지의 지배 아래 있게 된다고 봅니다.

26 수능특강 85쪽 <자료 플러스>

해설 中 : 루소에 따르면 개인은 사회 계약을 통해 오직 일반 의지에만 복종할 뿐 사적 의지에 종속당하지 않게 된다.

231-7, 231-8

밀은 개인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국가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국가는 개인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는 것을 자제시킬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가 개인의 행동을 자제시키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26 수능특강 85쪽 <자료 플러스>

밀 자료 中 : 인류가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어느 한 개인의 자유에 정당하게 간섭을 하는 유일한 목적은 자기방어이다. 권력은 문명사회의 한 구성원에게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정당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유일한 목적은 타인에게 가하는 해악을 방지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하다든지, 그것이 자신을 더욱 행복하게 만들 것이라든지, 다른 사람의 의견에 따르면 그렇게 하는 것이 현명하거나 심지어 정당하다고 한다든지 하는 등의 이유로 인해서 어떤 행동을 하거나 자제하는 것을 강제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232-1

공자는 군주가 전체 재화의 부족함을 염려하기보다는, 재화가 형평성 있게, 즉 공정하게 배분되지 않는 것을 염려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26 수능특강 84쪽 <자료 플러스>

공자 제시문 : 내가 듣자 하니 '나라를 경영하는[有] 자와 집을 경영하는 자는 적은 것을 근심하지 않고 오직 분배가 고르지 않은 것을 근심하며, 가난함을 근심하지 않고 편안하지 않은 것을 근심한다.' 했다. 분배가 고르면 가난함이 없고 화목하면 적음이 없고 편안하면 기울어짐이 없다. 그러므로 먼 나라 사람이 따르지 않으면 덕[文德]을 닦아서 스스로 찾아오게 하며 그들이 찾아오면 편안하게 해 주어야 한다.

232-2

로크는 공통의 법률과 권력이 존재하지 않는 자연 상태에서도 모든 개인은 재산권을 자연권 중 하나로 타고나므로 재산을 향유할 수 있다고 봅니다.

232-3

홉스에 따르면 자연 상태의 인간은 오직 자기 자신의 이성의 지배만 받으며, 그렇기 때문에 자유롭습니다.

26 수능특강 89쪽 5번 문항

홉스 제시문 中 : 만인에 대한 만인의 전쟁 상태에서 모든 사람은 오직 자신의 이성의 지배만 받을 뿐이며,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일은 결코 하지 않는다.

232-8

유교에서 주장하는 차별적 사랑은 기본적으로 존비친소, 그리고 시비선악을 분별하는 사랑입니다. 따라서 맹자는 군주가 선한 백성과 악한 백성을 분별하지 않고 평등하게 사랑해야 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26 수능특강 88쪽 2번 문항

⑤ 맹자는 군주가 선한 백성과 악한 백성을 분별하지 않고 사랑해야 한다고 본다. (X)

232-10

플라톤은 구성원 각자가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 각자가 본인 계층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26 수능특강 정답과 해설 26쪽 3번 문항

ㄱ. 플라톤은 국가가 생기는 것은 각자가 자급자족하지 못하고 서로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모든 구성원이 각자 자급자족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233-1

밀은 국가가 개인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막고자 하는 선한 의도로 개인의 행위에 간섭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26 수능특강 85쪽 <자료 플러스>**

밀 자료 中: 물리적 강제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그가 행하지 못하도록 제지당하는 행위가 타인에게 해악을 조장할 것이라는 사실이 예측되어야만 한다.

**233-4**

아리스토텔레스는 가족, 부락, 국가를 비롯한 모든 공동체가 선을 목적으로 형성되었다고 봅니다. 다만 이때 최고의 선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것은 오직 최고의 공동체인 국가뿐입니다.

**233-5**

홉스는 애초에 자연 상태에는 부정의의 관념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230-4, 230-6 해설 참고

**233-9**

로크는 자연 상태에는 공통의 법률과 공평한 재판관이 없어 모든 개인이 재판관을 자처하고 각자 자연법의 위반자를 재판하고 처벌하려고 하니, 바로 이 때문에 자연법의 해석과 집행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고 봅니다. 해당 선지의 경우 자연 상태에 자연법의 위반자를 재판하고 처벌하는 자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26 수능특강 정답과 해설 27쪽 6번 문항**

ㄴ. 로크는 자연 상태에서는 분쟁을 해결할 공정한 재판관이나 집행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자연 상태에서는 각자가 재판관이자 집행관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234-3**

로크에 따르면 국가를 구성할 때 각 개인은 처벌권(재판권, 자연법의 집행권)을 공동체에 양도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자연권을 양도하지는 않습니다. 로크는 개인이 생명권과 재산권은 국가에 양도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234-4**

홉스에 따르면 오히려 공통의 권력이 수립된 후에야 정의와 부정의의 관념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230-4, 230-6 해설 참고

**234-5**

233-9 해설 참고

**234-6, 234-7**

홉스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자연권을 타고나는데, 이때 홉스가 말하는 자연권은 ‘자기 자신을 보존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무제한의 권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회 계약을 맺으면서 개인들은 자기 자신을 보존하기 위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무제한의 권리를 포기하고, 대신 외부의 공격에 방어하여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생명권만을 남기게 됩니다.

따라서 홉스가 보기에 자연 상태의 모든 개인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사회 계약 이후 사회의 모든 인민에게는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무제한적 자유가 없게 됩니다(무제한적인 부분은 사회 계약 과정에서 이미 포기하고 공동체에 양도하였으므로).

**26 수능특강 91쪽 4번 문항**

홉스 제시문: 자연권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자기 뜻대로 자신의 힘을 사용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따라서 자연권을 공동체에 양도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연 상태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전쟁 상태에 있게 된다.

**234-9**

로크에 따르면 국가는 국가 공동체에 속한 시민들뿐만 아니라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외부인들 역시 처벌할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 235-5

루소는 국가가 오직 공통된 이익을 지향하는 의지, 즉 일반 의지에 따라서만 운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235-6

루소에 따르면 국가가 형성될 때 개개인은 (생명권을 비롯한) 자신의 자연권 전부를 공동체 전체에 양도하며, 그 과정에서 자신의 모든 권리와 힘을 일반 의지의 지배 아래 두게 됩니다.

#### 26 수능특강 정답과 해설 28쪽 3번 문항

⑤ 루소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루소는 국가가 형성될 때 개개인은 자신의 자연권 전부를 공동체 전체에 양도한다고 보았다.

### 235-7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의 주된 목적 중 하나가 시민의 미덕을 양성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가 개인의 가치관 수립과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는 공동체주의 사상가이기 때문입니다. 해당 선지의 경우 ‘시민의 미덕 양성이 아니라’라는 말이 잘못되었습니다.

#### 26 수능특강 90쪽 1번 문항

② 아리스토텔레스: 국가의 목적은 시민의 미덕 양성이 아니라 시민의 권리 보장이다. (X)

### 236-2

목자는 천하의 해악이 서로 평등하게 사랑하지 않는 것, 즉 겸애를 실천하지 않고 차별적으로 사랑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 26 수능특강 90쪽 2번 문항

목자 제시문 中: 대국이 소국을 공략하고, 강자가 약자를 강탈하고, 다수가 소수를 학대하고, 교활한 자가 우직한 자를 속이는 천하의 해악은 서로 사랑하는 데서 발생

하지 않았다. 남을 미워하고 남을 해치는 데서 발생하였다.

### 236-7

한비자는 군주가 위세의 높음으로 천하를 제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해당 선지의 경우 한비자의 입장에서 ‘위세의 높음이 아닌’이라는 말이 잘못되었습니다. (목자의 입장은 판단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 236-8

루소에 따르면 사회 계약이 시민들이 모든 권리를 양도하고 일반 의지의 지배 아래 있겠다고 동의하는 과정인 것은 맞지만, 어떤 자유도 누리지 않을 것임에 동의하는 과정인 것은 아닙니다. 루소는 사회 계약 과정에서 개인들은 자연 상태에서 누리던 자연적 자유를 포기하게 되지만, 동시에 사회 상태로 나아가면서 시민으로서의 자유인 시민적 자유를 누리게 된다고 봅니다.

#### 26 수능완성 126쪽 17번 문항

루소 제시문: 자연 상태에서부터 시민 상태로의 이행은 인간의 행위에 과거에는 없었던 도덕성을 부여한다. 사회 계약을 통해 인간은 자연적 자유를 상실하지만, 시민적 자유와 도덕적 자유를 얻을 수 있다.

### 236-9

로크에 따르면 자연 상태에서는 모두가 스스로 재판관이 되어 자연법의 위반자를 재판하고 처벌하기를 자처하기 때문에, 처벌권은 각 개인에 의해 불규칙하게 그리고 불확정적으로 행사됩니다. 바로 이와 같은 불안정성, 그리고 이에서 비롯되는 분쟁 때문에 자연 상태에서는 자연권의 향유가 불확실하게 되어, 결론적으로 개인들은 사회 계약을 맺어 공통의 재판관으로서의 국가를 수립하는 데 동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 26 수능특강 정답과 해설 28쪽 5번 문항

① 로크는 자연 상태에서 처벌권이 개인에 의해 불규칙

적이고 불확실하게 행사되어 폐단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 237-2

홉스에 따르면 통치자는 국가를 수립하기 위한 신의 계약 당사자(사회 계약의 주체) 중 한 명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 계약에 참여하지 않았던 외부인(제3자) 중 한 명입니다. 이처럼 홉스가 보기에 통치자, 즉 절대 군주는 애초에 사회 계약에 참여한 적부터가 없기 때문에, 군주는 사회 계약을 위반할 수도, 또한 사회 계약을 파기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집주인과 월세 계약을 맺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제 친구가 저의 월세 계약을 어길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애초에 제 친구는 월세 계약의 주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홉스에 따르면 절대 군주는 애초에 계약의 주체가 아니었으므로, 계약을 어기는 것도, 계약을 파기하는 것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 26 수능완성 135쪽 14번 문항

홉스 제시문: 비참한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사람들이 화합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오직 인위적인 신의 계약[信約]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만인의 상호 신의 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계약은 주권자 측에서 파기할 수 없다.

## 237-3

루소에 따르면 애초에 정부는 주권자가 아니며,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즉 루소의 입장에서는 국민이 주권자입니다.

## 237-7

홉스에 따르면 국가는 개인의 생명과 안전 보전, 그리고 이를 통한 인민의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해당 선지의 경우 ‘개인의 만족스러운 삶이 아니라’라는 말이 잘못되었습니다(“주권자(통치자)의 직무는 (군주든 합의체든) 그가 주권을 위임받은 목적, 즉 ‘국민 안전’의 획득에 있다. 그것은 자연법에 의해 그렇게 하도록 부과된 의무이며, 그는 자연법의 창조자인 오직 하나님에 대해서만 그 책임을 지

도록 의무가 부여되어 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안전은 단순한 생명의 유지가 아니라 생활상의 만족, 즉 모든 사람이 코먼웰스에 위협이나 해를 가하지 않고, 합법적 근로에 의해 모든 생활상의 만족도 획득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 237-10

루소에 따르면 각 개인은 사회 계약 과정에서 자신의 모든 힘과 권리를 양도하지만, 동시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개인들의 모든 힘과 권리도 양도되어 일반 의지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므로, 동시에 다른 개인들과 마찬가지로 나 역시 동등한 주권자 중 한 명이게 되므로, 사회 계약을 통해 그 어떤 개인도 다른 사람들과의 평등한 관계를 포기하지는 않게 됩니다.

## 238-1, 238-2

한비자와 맹자 모두 군주가 기본적으로 백성의 생업 보장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맹자와 한비자 모두 기본적으로 군주가 포상과 처벌을 활용해야 하며, 또한 물론 그것들은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238-3

맹자와 달리 한비자는 통치자가 자신을 수양하여 인의의 덕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한비자에 따르면 통치자는 덕에 기반한 통치인 덕치가 아니라, 엄격한 법과 형벌에 기반한 통치인 법치를 추구해야 합니다.

## 238-4

목자와 맹자 모두 군주가 하늘의 뜻, 즉 천명에 따라 올바르게 정치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이때 목자가 생각하는 천명이 모두를 평등하게 사랑하고 서로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이라면, 맹자가 생각하는 천명은 차별적 사랑의 정신인 인(仁)을 실천하는 것, 그리고 도덕적 본성에 따라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 238-7

목자는 자기 가족과 남의 가족을 차별하여 사랑하는  
분별적 사랑이야말로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고 봅니다. 236-2 해설 참고

### 238-9

로크에 따르면 인민에게는 입법부를 폐지할 권력(저  
항권)이 있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인민이 입법부를  
‘자의적으로’, 즉 합당한 기준 없이 폐지할 수 있음  
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로크에 따르면 입법부  
가 시민의 권리를 침해할 때 시민은 입법부에 대해  
저항권을 발휘하고 입법부를 교체할 수 있지, 아무  
때나 자의적으로(마음 내키는 대로) 입법부를 교체  
하거나 폐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239-3

루소에 따르면 ‘주권’과 ‘주권에 의해 파생된 권리’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특히 집행권은 주권에 의해 파  
생된 권력이므로, 언제나 국민에게 있어야 하는 주  
권과 달리 집행권은 정부에 부여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루소의 주장입니다.

### 239-4

로크에 따르면 자연 상태의 모든 개인은 자연법 위  
반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권한, 즉 재판권(처  
별권, 자연법의 집행권)을 가지고 있으나, 공통의 재  
판관으로서의 국가를 수립하기 위해 사회 계약을 맺  
는 과정에서 모든 개인이 각자의 재판권을 공동체에  
양도하게 됩니다. 따라서 국가의 모든 시민은 자연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권한  
이 없게 되며, 사회 상태부터는 개인 대신 국가가  
재판권과 처벌권을 가지게 됩니다.

### 26 수능특강 89쪽 6번 문항

로크 제시문 : 인간은 본래 타인의 침해와 공격으로부터  
그의 재산, 곧 생명, 자유, 자산을 보존할 권리뿐만 아니  
라 다른 사람들이 그 법을 위반할 것을 심판하고 처벌할  
수 있는 권리도 가진다. 따라서 정치 사회는 각각의 구성  
원이 이 자연권을 포기하고, 그 권리를 공동체의 수중에  
양도한 곳에서만 존재하게 된다.

### 239-6

홉스에 따르면 국가는 사회 계약의 결과물이지, 사  
회 계약의 주체가 아닙니다.

### 239-8

홉스에 따르면 인민은 법에 복종하는 존재이며, 법  
을 제정하는 존재는 절대 군주이니, 홉스의 입장에  
서 법에 복종하는 존재와 법을 제정하는 존재는 다  
르게 됩니다.

반면 루소에 따르면 법에 복종하는 존재도 국민, 법  
을 제정하는 존재도 국민이므로, 루소의 입장에서는  
법에 복종하는 존재가 곧 법을 제정하는 존재에게  
됩니다.

### 239-9

로크는 공통의 권력이 부재하는 상태, 즉 자연 상태  
에도 자연법을 위반하는 것이 가능하며, 바로 그와  
같은 자연법의 위반자를 재판하고 처벌하는 것을 두  
고 자연 상태에서는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고 봅니다  
(자연 상태에는 자연법을 해석하는 기준이 되어 주  
는 공통의 법률과 법률을 공정하게 집행해 줄 공평  
한 재판관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루소의 입장은 판  
단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236-9 해설 참고

### 240-1

홉스에 따르면 인민은 주권자의 행위와 판단을 자신  
의 것으로 인정할 의무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인민  
은 사회 계약 과정에서 자신의 모든 힘과 의지를 결  
합하여 절대 군주에게 양도하였기 때문입니다.

## 240-2

홉스는 인민과 달리 주권자, 즉 절대 군주는 사회 계약의 주체가 아니라고 봅니다. 237-2 해설 참고

## 240-4

루소에 따르면 주권도, 그리고 입법권도 절대 양도 되거나, 대표되거나, 분할될 수 없습니다.

## 240-5

237-2 해설 참고

## 240-6

로크는 입법권은 국가의 최고 권력이지만, 그러한 입법권은 오직 공동선과 개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하는 신탁된 권력이며, 만약 입법권이 공동선을 넘어서까지 사용될 경우 그 권력은 인민(의 저항권)에 의해 교체되거나 폐지될 수 있다고 봅니다.

### 26 수능완성 정답과 해설 43쪽 17번 문항

③ 로크는 국가의 최고 권력인 입법권이 공동선으로 제한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로크가 제기할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다.

## 240-7

로크는 이권 분립을 주장하며, 국가 권력이 법률을 제정하는 권한(입법권)과 법률을 집행하는 권한(집행권)으로 분할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241-1

루소에 따르면 주권과 입법권은 둘 다 양도될 수 없습니다. 해당 선지의 경우 ‘루소와 달리’라는 말이 잘못되었습니다. 240-4 해설 참고

## 241-7

로크에 따르면 국가의 모든 구성원은 주권자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입법권과 집행권이 모두 국민에게 있게 되는 것은 아니고, 로크의 입장에서 일반적으로 입법권은 입법부에, 집행권은 정부에 부여됨으로써 국가 기관이 국민을 대표하여 정치적인 의사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이것이 바로 간접 민주제입니다). 해당 선지의 경우 국가의 모든 구성원이 법을 제정하고 집행할 권력, 즉 입법권과 집행권을 갖는다는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 241-10

로크는 국가에 대한 정치적 의무, 즉 국가의 명령에 복종할 준법의 의무는 명시적 동의뿐만 아니라 묵시적(암묵적) 동의에 의해서도 발생한다고 주장합니다.

## 242-1

홉스, 로크, 그리고 루소까지, 모든 사회 계약론 사상가가 국가 권위의 정당성은 자연 발생적이지 않고 개인 간의 인위적인 상호 계약에 의해 발생한다고 봅니다.

## 242-2

로크는 자연 상태에 개인이 준수해야 할 규범으로서 ‘자연법’이 존재하며, 자연 상태는 자연법의 지배를 받는 상태라고 주장합니다.

## 242-3

루소와 달리 홉스는 애초에 모든 국가 구성원이 주권자라고 보지 않습니다. 홉스에 따르면 주권은 인민이 아니라 절대 군주에게 있는 것입니다. 즉 절대 군주가 주권자입니다.

**23 9월 모의평가 19번 문항**

홉스 제시문 : 국가가 없는 자연 상태에서 개개인인 모든 것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자기 보존과 평화를 위해 그러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주권자인 리바이어던이 탄생한다.

**242-7**

로크에 따르면 입법부는 법을 제정할 권한, 즉 입법권을 가지며, 법을 집행할 권한, 즉 집행권은 입법부가 아닌 정부에 있게 됩니다.

**242-8, 242-9**

로크에 따르면 자연 상태는 자연법의 지배를 받는 상태이지만, 자연법의 위반자가 발생했을 때 그 자연법의 위반자를 재판하고 처벌해 줄 공통의 법률과 공평한 재판관이 존재하지 않아 개인들은 자연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데 불편을 겪게 되고, 그래서 개인들은 공통의 재판관으로서의 국가를 수립하는 데 합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236-9 해설 참고

**24 9월 모의평가 13번 문항**

로크 제시문 : 사람들은 자연법 집행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는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그들이 자연 상태에서 가졌던 평등, 자유 및 집행권을 입법부가 처리할 수 있도록 사회의 수중에 양도한다. 이에 대한 명시적 동의는 그들을 공통된 법률의 지배하에 둌으로써 사회의 완전한 구성원으로 만든다.

**243-2**

홉스에 따르면 공동의 평화를 위해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절대 군주인데, 절대 군주는 애초에 사회 계약의 주체가 아니었습니다. 237-2 해설 참고

**243-4, 243-6**

홉스는 사회 계약을 맺을 때 개인들이 모든 자연권을 양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외부의 공격에 맞서 자신의 생명을 방어할 수 있는 자기 보존의 권리를 제

외하고 모든 권리를 전면 양도한다고 봅니다.

**243-5**

로크는 국가가 개인의 생명권뿐만 아니라 예컨대 재산권을 침해할 때에도 국가 권력에 저항할 수 있다고 봅니다.

**23 6월 모의평가 11번 문항**

ㄴ. 로크 : 정부에 의한 시민의 재산권 침해는 정부 해체의 근거가 되는가? (O)

**243-8**

홉스는 권력의 집중을, 로크는 권력의 분립을 주장합니다.

**26 수능완성 정답과 해설 19쪽 5번 문항**

ㄱ. 홉스는 사람들이 비참한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모든 권력과 힘을 한 사람 또는 하나의 합의체에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를 ‘리바이어던’이라고 하였다. 로크는 국가의 권력을 크게 입법권과 행정권으로 구분하여 실제적으로 2권 분립을 주장하였다.

**243-9**

홉스와 로크 모두 사회 계약을 맺을 때 개인의 이성적인 판단 능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43-10**

로크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국가 기관에 대한 개인의 저항권을 인정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은 판단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244-1**

241-10 해설 참고

**244-2**



로크와 홉스 모두 인간이 자연 상태에서 항구적인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다고 봅니다. 애초에 자연 상태가 전쟁 상태라고 보는 홉스는 물론이고, 로크의 경우에도 공통의 법률과 공평한 재판관을 계속해서 수립하지 않는다면 자연법의 해석과 집행을 둘러싼 분쟁이 격화되어, 결국에는 자연 상태가 전쟁 상태로 흐르고 말 것이라고 봅니다.

#### 244-4

로크는 인간의 소유물에 대한 권리, 즉 소유권(재산권)이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타고나는 자연권 중 하나라고 봅니다. 반면 홉스는 국가 권력 수립 이후에 소유권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해당 선지의 경우 로크의 입장에서 인간의 소유물에 대한 권리가 국가 성립 이후에 발생한다는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 26 수능완성 정답과 해설 39쪽 16번 문항

⑤ 홉스는 로크와 달리 개인의 소유권이 국가 형성 이후에 생긴다고 보기 때문에, 사회 계약 이전에는 각자에게 고유한 재산권이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홉스가 로크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적절하다.

#### 244-5

루소에 따르면 입법권은 주권자의 대리인인 정부가 아닌 주권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 244-6

아리스토텔레스와 루소 모두 국가 권력이 구성원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 행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해당 선지의 경우 ‘아리스토텔레스와 달리’라는 말이 잘못되었습니다.

#### 244-8

홉스에 따르면 각 개인은 절대 권력의 수립을 위해, 오직 생명의 위협에 저항할 권리를 제외하고 다른 모든 권리를 공동체에 전면 양도합니다.

#### 245-1

로크에 따르면 공통의 법률이나 재판관이 없는 상태, 즉 자연 상태에서도 모든 개인은 자연권을 향유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향유는 불완전하고, 항구적이지 못합니다.

#### 245-3

로크에 따르면 국가에 복종할 의무는 암묵적(묵시적) 동의를 통해서도 발생하지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의무, 즉 시민으로서 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에 기여할 의무는 오직 명시적 동의를 통해서만 발생합니다.

#### 245-4

로크에 따르면 모든 개인은 재산에 대한 소유 권리, 즉 소유권(재산권)을 자연권 중 하나로 태어날 때부터 타고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로크가 보기에 개인들이 집행권을 공동체에 양도하는 것은 재산권을 형성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재산권을 비롯한 자연권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장받기 위해서입니다.

#### 245-6

밀에 따르면 개인이 자유롭게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는 과정에서도 고통은 초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여러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어쨌든 타인의 강제가 아닌 본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삶을 꾸려나가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이 바로 밀의 생각입니다.

##### 26 수능완성 55쪽 <자료와 친해지기>

밀 자료 中: 자유 가운데에서도 가장 소중하고 또 유일하게 자유라는 이름으로 불릴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자유를 얻기 위한 노력을 방해하지 않는 한, 각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는 자유이다. 우리의 육체나 정신, 영혼의 건강을 보위하는 최고의 책임자는 누구인가? 그것은 바로 각 개인 자신이다. 우리는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자기 식대로 인생을 살아가다 일이 잘못되어 고

통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설령 그런 결과를 맞이하더라도 자신이 선택한 길을 가게 되면 다른 사람이 좋다고 생각하는 길로 억지로 끌려가는 것보다 궁극적으로는 더 많은 것을 얻게 된다. 인간은 바로 그런 존재이다.

## 245-8

유교 사상가들은 일반적으로, 특히 맹자는 인간의 본성이 도덕적으로 선하다는 성선설을 지지하며, 백성의 선한 본성을 변화시킬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전하고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245-9, 245-10

맹자에 따르면 힘으로써 다른 사람을 복종시키고자 하는 자에게는 모두가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복종할 뿐, 그 누구도 진심으로 복종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맹자는 오직 덕으로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고 교화시킬 수 있는 통치자만이 백성의 마음을 진정으로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 246-1, 246-2

맹자에 따르면 패도 정치는 힘과 위압으로 백성을 지배하면서도 인(仁)을 가장하는 정치이며, 패도 정치를 하는 패자는 영토 확장을 위한 전쟁을 거듭함으로써 대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나 맹자가 보기에 왕도 정치를 실현하는 데 것처럼 큰 나라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 26 수능완성 58쪽 3번 문항

맹자 제시문 : 힘을 가지고 인(仁)을 병자하는 것을 패도(霸道)라고 하는 것이니, 패자는 반드시 대국(大國)을 소유하고 있다. 덕(德)을 가지고 인을 행하는 것을 왕도(王道)라고 하는 것이니, 왕도 정치는 대국을 기다리지 않는다. 힘으로써 남을 복종시키는 자에게는 마음으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넉넉하지 못하여 복종하는 것이다. 덕으로써 남을 복종시키는 자에게는 속마음에서 기뻐하여 진실로 복종하는 것이다.

## 246-5

## 244-4 해설 참고

## 246-6

로크에 따르면 자연 상태는 공통의 법률과 공평한 재판관이 부재하는 상태로, 개인은 자연 상태에서 자연권을 온전히 향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가를 수립하는 데 합의하게 됩니다.

### 26 수능완성 정답과 해설 19쪽 5번 문항

ㄹ. 홉스는 인간이 자연 상태에서 자연권을 소유하고 있지만 자연 상태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와 같으므로 자연권을 온전히 향유할 수 없다고 보았다. 로크 역시 인간이 자연 상태에서 자연권을 소유하고 있지만 자연권이 침해될 경우 이를 해결할 공통의 재판관이 없어 자연권을 온전히 향유할 수 없다고 보았다.

## 246-7

홉스, 로크, 루소 모두 개인의 자연권을 인정하며, 사회 계약 이전부터 모든 인간이 타고나는 자연적 권리가 존재한다고 봅니다.

## 247-1

홉스에 따르면 인간은 이기적이지만, 동시에 이성적 이기에, 합리적 행위가 불가능한 존재가 아닙니다.

## 247-3

홉스와 로크 모두 자연권에 자유에 대한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홉스의 경우 애초에 자연권을 ‘자기 자신을 보존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무제한의 권리’로 규정하며, 로크의 경우 자연권의 목록으로 생명권, 자유권, 재산권, 그리고 자연법의 집행권(재판권, 처벌권)을 제시합니다.

### 26 수능완성 정답과 해설 20쪽 7번 문항

④ 홉스와 로크 모두 인간이 자연 상태에서 자연권을 지닌다고 보았다. 홉스에 따르면 자연권이란 자기 보존을 위해 자신의 힘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로크는 자연 상태에서 인간이 생명과 자유, 재산에

대한 권리를 지닌다고 보았다.

#### 247-4

홉스에 따르면 애초에 자연 상태에는 불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루소와 로크의 입장은 판단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230-4, 230-6 해설 참고

#### 247-6, 247-7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상호 간에 부당 행위를 방지하고 교역을 촉진하는 것은 국가의 필수적인 역할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국가의 역할이 그것에 국한되어서는 안 되며, 국가는 시민의 미덕을 양성하고 최고선을 실현하는 도덕적인 역할까지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입니다.

##### 26 수능완성 61쪽 9번 문항

아리스토텔레스 제시문 中 : 국가는 같은 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단순한 공동체가 아니며, 상호 간에 부당 행위를 방지하고 교역을 촉진하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국가가 존재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지만, 그런 조건이 다 충족된다고 해서 국가가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란 그 구성원들의 가족과 씨족이 잘 살 수 있게 해 주기 위한 공동체이며, 그 목적은 완전하고 자족적인 삶입니다.

#### 247-8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공동체의 발생 순서는 가족이 가장 먼저, 그 다음이 가족을 포괄하는 부락, 마지막으로 가족과 부락을 모두 포괄하는 국가입니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에서 국가를 두고 최초로 생겨난 공동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 26 수능완성 정답과 해설 20쪽 9번 문항

② 아리스토텔레스는 일상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최초로 생겨난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를 가족이라고 보았다.

#### 248-2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국가는 물질적인 측면과 도덕적인 측면 모두에서 자족성의 실현을 추구해야 합니다. 즉 아리스토텔레스가 보기에 국가는 물질적인 측면에서도 다른 국가의 도움 없이 국가 자신의 존재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도덕성의 차원에서도 시민의 최고선을 실현하기에 그 자체로 충분해야 합니다.

##### 26 수능완성 정답과 해설 20쪽 9번 문항

⑤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야말로 물질적 측면과 도덕적 측면 모두에서 자족성을 갖춘 포괄적인 공동체라고 보았다.

#### 248-3

로크는 자연 상태에서 재산의 향유가 가능하지만, 그것이 확실하지는 않다고 주장합니다. 232-2 해설 참고, 236-9 해설 참고

#### 248-4

홉스에 따르면 절대 권력에 대한 두려움과 시민의 자유는 공존할 수 있습니다. 홉스가 보기에 인민은 절대 권력에 종속되어 있지만, 이때 절대 권력이란 애초에 그 범위가 사회 평화와 공동 방위의 영역에 국한됩니다. 이는 국민의 사적인 영역, 이를테면 아침 식사로 무엇을 먹을 것인지와 같은 영역에서는 국민이 자유를 누릴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 248-5

244-4 해설 참고

#### 248-7

242-2 해설 참고

#### 248-8

로크에 따르면 사회 계약의 참여자는 국민인데, 입법권은 국민이 아니라 입법부에 있습니다. 한편 홉

스에 따르면 사회 계약의 참여자는 인민인데, 입법권은 인민이 아니라 절대 군주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로크와 홉스 모두 입법권이 사회 계약의 참여자에게 있지 않다고 봅니다(그리고 이는 로크 및 홉스와 루소의 차이점이 됩니다. 루소는 사회 계약의 참여자, 즉 국민에게 입법권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 248-10

로크는 사회 계약의 당사자가 계약 과정에서 처벌권을 양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239-4 해설 참고

## 249-1

홉스에 따르면 애초에 자연 상태에는 부정의의 관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230-4, 230-6 해설 참고

## 249-3

244-4 해설 참고

## 249-4

247-3 해설 참고

## 249-5

홉스에 따르면 개인이 전쟁 상태로서의 자연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죽음에 대한 공포와 평화에 대한 희망의 '정념', 그리고 자연법을 발견하고 제안할 수 있는 '이성' 모두를 통한 것입니다("자연 상태의 인간에게 가혹한 전쟁 상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가능성은 한편으로는 죽음에 대한 공포와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을 획득하고자 하는 욕망과 희망의 정념을 통해서,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성이 각자가 서로 합의할 수 있는 적절한 평화의 규약들인 자연법을 제안하는 것에 의해 생겨난다."). 해당 선지의 경우 '정념이 아니라'라는 말이 잘못되었습니다.

### 26 수능완성 126쪽 17번 문항

홉스 제시문 中 : 인간이 전쟁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의 일부는 인간의 정념에서, 일부는 인간의 이성에서 생겨난다.

## 249-6

로크는 개인이 사회 계약을 맺게 되는 동기가 재산권을 비롯한 자연권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장받고자 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루소는 개인이 사회 계약을 맺게 되는 동기가 사유 재산제의 발생 이후 개인 간 불평등이 심화되고 그로 인해 사회 갈등과 혼란이 격화되면서, 모두가 특수 의지가 아닌 일반 의지의 지배 아래 공공의 이익을 지향하는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한 데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둘 모두의 입장에서 개인이 사회 계약을 맺게 되는 동기가 재산권과 무관하지 않게 됩니다.

### 26 수능완성 정답과 해설 47쪽 17번 문항

문제분석 中 : 로크는 사람들이 자연 상태에서의 분쟁을 해결하고 자신의 생명과 자유, 재산을 보장받기 위해 사회 계약을 맺음으로써 국가가 구성된다고 보았다. 루소는 자연 상태에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자유롭고 평등하며 평화로운 삶을 누리지만, 사회 상태로 옮겨 가면서 사유 재산의 발생과 함께 불평등과 예측의 불행한 상태에 처하게 된다고 보았다. 이에 루소는 사람들이 이러한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계약을 맺어 국가를 구성한다고 주장하였다.

## 249-7

239-8 해설 참고

## 249-10

로크에 따르면 개인은 사회 계약 과정에서 재산권을 양도하지 않습니다. 234-3 해설 참고

## 250-1

로크에 따르면 개인은 생명권과 재산권을 양도하지 않는데, 국가는 물론 개인이 양도하지 않은 생명권

과 재산권까지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양도하지 않았다고 해서 국가가 보장해 주지 않는다? 말이 안 됩니다. 애초에 국가에 권리를 양도하는 것도 그 권리를 보장해 달라고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로 하여금 개인들을 통치하거나 개인들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일종의 힘과 권력을 주기 위해 양도하는 것입니다.

**26 수능완성 정답과 해설 47쪽 17번 문항**

ㄱ. 로크는 자연권으로서 재산권은 시민이 국가에 양도하지 않은 권리이지만, 사람들은 재산권을 더 안전하게 보장받기 위해 계약을 맺어 국가를 형성한다고 보았다.

**24 9월 모의평가 13번 문항**

ㄱ. 로크: 국가에 양도하지 않은 시민의 권리는 보장될 수 없다. (X)

**250-2**

로크에 따르면 주권자는 국민이고, 입법자는 입법부입니다. 홉스에 따르면 주권자와 입법자 모두 절대 군주입니다. 따라서 로크와 달리 홉스는 주권자가 유일한 입법자라고 봅니다.

**250-3**

홉스와 로크 모두 국가가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고 시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고 봅니다. 해당 선지의 경우 ‘홉스와 달리’라는 말이 잘못되었습니다.

**250-4**

홉스는 개인이 모든 자연권을 조건 없이 양도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243-4, 243-6 해설 참고

**250-7**

홉스에 따르면 애초에 자연 상태에는 부정의의 관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230-4, 230-6 해설 참고

**250-9**

홉스에 따르면 국가는 사회 계약의 결과물이지만, 사회 계약의 주체가 아닙니다.

**250-10**

아리스토텔레스와 달리 홉스는 국가가 상호 신의 계약으로 형성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자연적 인격이 아닌 인위적 계약의 산물, 즉 인위적 인격이라고 봅니다.

**251-1**

아리스토텔레스는 애초에 국가가 계약의 산물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국가는 계약, 합의, 동의, 약속 등의 인위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인간의 정치적 본성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생한 자연적 공동체입니다.

**251-2**

홉스에 따르면 주권자, 즉 절대 군주는 사회 계약을 위반할 수도, 파기할 수도 없습니다. 237-2 해설 참고

**251-7**

롤스는 시민 불복종이 ‘부정직한 체제’의 사회에서는 발생할 수 없으며, 오직 심각한 부정의가 존재하는, 그러나 체제는 정의로운 사회(‘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만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롤스에 따르면 체제가 부정직한 사회에서는 시민 불복종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합당한 전망이 없게 되며, 또한 체제부터가 부정직한 경우 일부 법, 제도, 정책에 대한 저항으로서의 시민 불복종이 아닌, 체제의 근본적 변혁을 위한 시도로서의 혁명이 필요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그런 사회에서는 시민 불복종이 성립 불가능하게 됩니다.

**251-10**

롤스에 따르면 시민 불복종은 현존하는 부정의를 교

정하기 위한 것이고, 동시에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의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해당 선지의 경우 ‘부정의를 교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라는 말이 잘못되었습니다.

는 정의로운 체제를 지켜야 하는 우리의 의무로 인해 부정의한 법도 따라야 할 의무를 갖는다. 하지만 우리 자신과 타인의 기본적 자유가 부정되는 것을 묵인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지는 않는다.

## 252-1

롤스에 따르면 시민 불복종은 체제는 정의롭지만 가끔 심각하게 부정의한 법, 제도, 정책이 제정되기도 하는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성립하는 것입니다. 251-7 해설 참고

## 253-2

롤스에 따르면 시민 불복종은 개인적인 도덕 원칙이 아니라 다수의 정의관(정의의 원칙, 사회적 협동의 기본 원리)에 따라 지도되고 정당화되는 도덕적인 행위입니다.

## 252-2

롤스에 따르면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도 일부 사소하게 부정의한 법에 대해서는 준수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롤스는 시민 불복종의 대상을 ‘명백하고 심각한 부정의’에 국한시키며, 심각하지 않고 사소한 부정의에 대해서는 체제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위해 저항하지 않고 참을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 26 수능특강 87쪽 <자료 플러스>

해설 中 : 그(롤스)는 거의 정의로운 사회의 시민은 부정의한 법이 어느 정도의 부정의를 넘어서지만 않는다면 그 법을 따라야 할 자연적 의무가 있다고 보고, 시민 불복종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나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에 대한 현저한 위배에 국한하여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 253-4

롤스에 따르면 심각하고 현저한 부정의에 대한 항거 일지라도 그것이 개인적인 신념이나 양심에 근거하고 다수의 정의관에 근거하지 않는 것이라면, 해당 행위는 양심적 거부로 되지 시민 불복종은 절대 못 되게 됩니다.

## 253-5

롤스에 따르면 시민 불복종은 헌법과 사회 제도를 규제하는 원칙, 즉 정의의 원칙에 의해 지도된다는 점에서 정치적인 행위입니다.

## 252-9

롤스에 따르면 정의로운 체제를 유지할 자연적 의무는 사소한 부정의는 그냥 참고 묵인할 것을 요구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본적 자유의 심각한 부정까지 묵인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롤스에 따르면 평등한 자유의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즉 기본적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법, 제도, 정책의 경우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26 수능특강 89쪽 8번 문항

롤스 제시문 : 어느 정도 정의의 원칙을 만족시키는 강력한 입헌 체제가 존재하는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우리

## 253-6

싱어에 따르면 시민 불복종의 주체들은 시민 불복종이 아닌 다른 수단으로 부정의 개혁에 성공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시민 불복종은 합법적 수단이 성공적이지 못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 253-7

싱어는 정당한 시민 불복종도 어쨌든 위법 행위라는 점에서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심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참고로, 싱어에 따르면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심 감소는 시민 불복종으로 인한 사회적 손

실 중 하나이며, 따라서 정당한 시민 불복종이 되려면 분명히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심 감소를 비롯한 손실의 크기보다 시민 불복종을 통해 멈출 수 있는 악(부정의)의 크기, 즉 시민 불복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이익의 크기가 더 커야만 할 것입니다.

## 253-8

롤스는 심각하고 현저한 부정의라고 할지라도 예컨대 그것이 부정한 체제의 사회에서 일어난 것이라면 시민 불복종을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보며, 또한 예컨대 이미 그것을 개정할 수 있는 합법적 수단이 존재한다면 역시나 시민 불복종을 발생시키지 않을 수 있다고 봅니다. 즉 롤스는 다양한 이유로, 심각하고 현저한 부정의의 존재가 반드시 시민 불복종을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 253-9

롤스에 따르면 거의 정의로운 사회가 바로 민주 체제(정의로운 체제)의 사회이면서도 동시에 가끔 다소 심각한 부정을 발생시키기도 하는 사회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와 같은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만 시민 불복종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251-7 해설 참고

## 253-10

롤스에 따르면 법의 부정의는 그 법에 정당하게 항거하기 위한 충분 조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법이 부정한데 그 부정이가 명백하지 않거나 심각하지 않다면, 일단 해당 법은 시민 불복종의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 26 수능특강 92쪽 6번 문항

ㄷ. 롤스 : 법이 부정하다는 사실이 그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충분한 조건은 아니다. (O)

## 254-2

롤스에 따르면 시민 불복종은 다수에 대한 합법적 호소, 즉 합법적 수단을 통한 개정 시도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합법적 수단을 통한 개정 시도 이후에 최후의 수단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 22 수능 3번 문항

④ 롤스 : 시민 불복종은 합법적인 정치적 반대와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한다. (X)

## 254-3

롤스에 따르면 체제와 기본 구조는 합당하게 정의롭지만 가끔 심각하게 부정한 법, 제도, 정책이 제정되기도 하는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시민 불복종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251-7 해설 참고

## 254-4

롤스와 싱어 모두 시민 불복종의 효율성이 감소하는 지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롤스의 경우 시민 불복종으로 인해 체제의 효율성과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는 지점을 고려하여, 시민 불복종이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해당 선지의 경우 ‘롤스와 달리’라는 말이 잘못되었습니다.

### 26 수능특강 정답과 해설 29쪽 7번 문항

ㄴ. 롤스와 싱어는 모두 시민 불복종의 효율성이 감소하는 지점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롤스는 많은 집단이 시민 불복종에 가담할 경우 정의로운 체제의 효율성을 침해하게 될 극심한 무질서가 따를 수 있다고 보고, 시민 불복종에 가담할 수 있는 범위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싱어는 시민 불복종이 산출할 이익과 손해를 계산해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254-5

롤스와 싱어 모두 다수결의 원칙에 부합하는 법에 대한 복종의 의무가 절대적이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즉 둘 다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제정된 법에 대해서도 시민 불복종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

면 롤스는 불완전한 절차적 정의를 주장하며, 다수결의 원칙도 결국에는 불완전한 법 제정 절차라고 보기 때문이고, 싱어는 다수의 진정한 결정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극심하게 부정의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롤스의 입장에서 다수의 의견(다수의 결정)과, 다수의 정의관은 다른 것입니다. 롤스가 보기에 다수의 의견은 잘못될 수 있지만, 다수의 정의관은 전적으로 옳은 것(옳음의 기준)입니다.

#### 26 수능특강 정답과 해설 29쪽 7번 문항

ㄷ. 롤스와 싱어는 모두 다수결 원칙에 부합하는 법이어도 이에 복종할 의무가 절대적이지는 않다고 보았다. 롤스는 다수결 원칙에 부합하는 법이 공유된 정의감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불복종할 수 있다고 보았다. 싱어는 다수결 원칙에 부합하는 법이 공리에 어긋날 경우 불복종할 수 있다고 보았다.

#### 26 수능완성 60쪽 8번 문항

ㄱ. 롤스: 입법 과정에서 다수결의 원칙을 통해 법이 제정된다면 그 법의 정의로움이 보장된다. (X)

#### 23 6월 모의평가 12번 문항

ㄴ. 싱어와 롤스: 다수결 원칙에 따라 민주적으로 제정된 법은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아니다. (X)

## 254-6

싱어에 따르면 시민 불복종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대한 존중을 표하는 행위이지만, 동시에 합법적 행위가 아니라 엄연히 법을 의도적으로 위반하는 위법 행위입니다.

## 254-10

싱어는 다수의 진정한 결정이 극심하게 부정의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254-5 해설 참고

## 255-1

롤스와 싱어 모두 시민 불복종이 성공 가능성에 대한 숙고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롤스

는 부정의한 사회처럼 체제나 기본 구조 자체가 부정의해 시민 불복종을 해도 성공 가능성이 없는 사회에서는 애초에 시민 불복종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해당 선지의 경우 ‘롤스와 달리’라는 말이 잘못되었습니다.

## 255-4

롤스에 따르면 항의의 대상이 되는 부정의한 법만이 아니라, 해당 법에 대한 저항 의사를 간접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다른 정당한 법을 대신 위반할 수도 있는데, 이와 같은 시민 불복종의 방식을 두고 롤스는 ‘간접적 시민 불복종’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 26 수능특강 정답과 해설 29쪽 8번 문항

④ 롤스에 따르면 시민 불복종은 대상이 되고 있는 법을 위반할 경우, 그 처벌이 합당한 범주를 넘어서면 처벌이 경미한 다른 법을 어기는 방식으로 행해질 수 있다.

#### 26 수능완성 58쪽 4번 문항

ㄱ. 롤스: 시민 불복종의 항의 대상과 실제 불복종하는 대상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O)

#### 23 6월 모의평가 12번 문항

ㄷ. 롤스: 부정의한 법을 변혁하고자 불가피하게 다른 법을 위반하는 시민 불복종은 정당화될 수 있다. (O)

## 255-5

롤스는 시민 불복종을 통해, 시민 불복종의 주체들의 요구에 대한 숙고를 다수에게 강요하게 된다고 봅니다. 이는 시민 불복종이 사회에 발생한다면, 구성원 다수는 그러한 시민 불복종 행위가 정당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 숙고해 볼 수밖에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롤스의 입장에서 부정의를 강요하는 것과 부정의에 대한 숙고를 강요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전자는 해당 법이 부정의하다고 생각하라고 강요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말이 안 되고요. 사회 구성원 다수가 진짜 그 법이 부정의한지 그 여부에 대해 숙고해 볼 것을 강요한다고 해야 롤스의 입장에서 옳게 됩니다.



**26 수능특강 정답과 해설 29쪽 8번 문항**

⑤ 롤스는 시민 불복종이 공유된 정의감에 비추어 다수에게 소수자의 합당한 요구에 대한 속고를 강요하게 된다고 보았다.

**25 9월 모의평가 12번 문항**

ㄷ. 롤스: 시민 불복종은 공유된 정의관에 따른 속고를 권력자들에게 촉구한다. (O)

**26 수능완성 119쪽 10번 문항**

ㄴ. 롤스: 정치 체제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시민 불복종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O)

**24 9월 모의평가 7번 문항**

① 롤스: 시민 불복종은 정치 체제의 효율성을 이유로 제한될 수 있다. (O)

**255-6, 255-7**

싱어에 따르면 시민 불복종은 일반적으로 민주주의적 의사결정, 즉 다수의 진정한 결정을 복원하기 위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만약 다수의 진정한 결정이 심각하게 그릇된 것처럼 보인다면, 다수의 진정한 결정에 반하는 시민 불복종도 가능하다는 것이 바로 싱어의 생각입니다.

**255-10**

롤스에 따르면 시민 불복종은 법을 의도적으로 위반하는 위법 행위이지만, 동시에 부정의를 개선하고 정의를 증진함으로써 입헌 체제를 안정시키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256-1**

롤스에 따르면 시민 불복종의 대상은 애초에 개별 법, 제도, 정책이지, 체제, 기본 구조, 헌법이 아닙니다. 부정의한 정치 체제를 변혁하기 위한 시도는 시민 불복종이 아니라 혁명(쿠데타)에 속하게 됩니다.

**256-2, 256-3**

롤스는 시민 불복종으로 체제의 효율성이 침해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며, 따라서 시민 불복종의 규모가 너무 커져 체제의 효율성이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시민 불복종에 가담할 수 있는 범위에 한계를 두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256-4**

롤스는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시민들만이 시민 불복종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하지 않는 시민들의 경우, 그들은 아무래도 시민 불복종이 아니라 체제의 근본적 변혁, 즉 혁명을 시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256-8**

롤스는 사회의 기본 구조가 합당하게 정의로운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심각하지 않고 사소하게 부정의한 법은 준수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사소하게 부정의한 법에 대해서도 모두 시민 불복종을 할 경우 정의로운 체제의 효율성과 안정성이 침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52-2 해설 참고

**256-9**

255-4 해설 참고

**257-1**

롤스에 따르면 시민 불복종은 사회 협동체의 원칙, 즉 정의의 원칙에 이의를 제기하는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정의의 원칙에 근거하는 행위입니다.

**257-2**

롤스는 시민 불복종이 사회에 초래할 수 있는 불행한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254-4 해설 참고

## 257-5, 257-6

롤스와 싱어와 달리 소로는 모든 부정의한 법에 대해 즉각 불복종할 것을 주장합니다.

## 257-7

롤스에 따르면 규모가 지나치게 확대된 시민 불복종 행위는 사회에 극심한 무질서를 초래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사실은 시민 불복종 행위가 ‘그 자체로’ 사회에 극심한 무질서를 초래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롤스는 시민 불복종이 정당하고 온당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 그 시민 불복종 행위는 오히려 정의로운 체제의 안정성에 기여하게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 257-9

롤스에 따르면 소수자의 항거일지라도 만약 그들의 항거가 다수의 정의관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면, 물론 정당한 시민 불복종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 257-10

롤스와 달리 싱어는 시민 불복종의 목적이 이익 증진에 있다고 봅니다. 또한 싱어가 보기에는 바로 이익을 증진하는 것이야말로 사회 정의 실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해당 선지의 경우 싱어의 입장에서 시민 불복종의 목적이 이익 증진에 있지 않다는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 258-2

싱어와 소로, 그리고 롤스까지, 모두가 사회 구성원 다수의 의사결정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며, 따라서 다수의 결정에 따라 제정된 법에 대한 시민 불복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 258-3

소로와 롤스 모두 시민 불복종은 양심적이고 깊이 간직된 신념을 표현하는 행위라고 봅니다.

## 258-6

254-4 해설 참고

## 258-7

롤스는 시민 불복종이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동시에 법의 경계선(테두리) 밖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라고 봅니다. 롤스에 따르면 시민 불복종은 법을 위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법의 경계선(테두리) 안에 있는 행위가 될 수는 없습니다.

## 258-8

롤스에 따르면 오직 거의 정의로운 국가 내에서만 시민 불복종 문제가 발생합니다. 거의 정의로운 사회가 아닌 다른 사회들에서는 애초에 시민 불복종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51-7 해설 참고

## 258-9

롤스와 싱어 모두 자유를 침해받아 온 소수의 시민 불복종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해당 선지의 경우 ‘롤스와 달리’라는 말이 잘못되었습니다. 254-4 해설 참고

## 258-10

롤스는 다수의 공유된 정의관 자체는 시민 불복종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롤스에 따르면 다수의 공유된 정의관은 시민 불복종의 기준이자 근거이지,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아닙니다.

## 259-4, 259-7

롤스는 평등한 자유의 원칙 혹은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을 위반하는 법일지라도 그 위반이 심각하지 않고 사소하다면 그 법은 시민 불복종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봅니다.

## 259-6

롤스에 따르면 사소하게 부정의한 법이나 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의를 그냥 참고 준수할 필요도 있습니다. 252-2 해설 참고

## 259-8

롤스에 따르면 시민 불복종은 오직 공중의 정의감에 의해 규제되는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만 성립하는 것입니다. 사회 자체가 공중의 정의감에 의해 규제되지 않는 부정의한 사회의 경우, 사회 전체를 변혁하는 혁명(쿠데타)가 필요하게 되며, 그러한 사회에서 시민 불복종은 원천적으로 성립 불가능하게 됩니다.

### 26 수능완성 정답과 해설 19쪽 4번 문항

ㄷ. 롤스에 따르면 시민 불복종은 일반적으로 공동 사회의 다수자가 갖는 정의감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규제되는 사회에서만 합당하고 효율적인 반대 형식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 260-1

롤스에 따르면 애초에 정의로운 법의 제정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완전한 법 제정 절차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롤스는 민주 정부에서 제정한 법 역시 부정의할 수 있다고 보며, 따라서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 260-2

롤스에 따르면 시민 불복종은 애초에 부정의한 체제를 근본적으로 변혁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며, 체제의 변혁을 시도하는 행위는 혁명(쿠데타)에 속하게 됩니다.

## 260-4

롤스는 시민 불복종이 공동체의 정의감에 호소하여 정의를 지키고자 하는 위법 행위라고 봅니다. 해당 선지의 경우 ‘합법적인’이라는 말이 잘못되었습니다.

## 260-6

255-4 해설 참고

## 260-7

롤스에 따르면 차등의 원칙에 근거한 법은, 만에 하나 항의의 직접적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되는 다른 부정의한 법에 대한 저항 의사를 간접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의도적 위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55-4 해설 참고

## 260-10

롤스와 싱어 모두 시민 불복종이 중단시킬 수 있는 악의 크기, 즉 항거의 대상으로 삼는 부정의의 크기가 시민 불복종의 정당성을 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 261-1

롤스는 기본적으로 다수의 정의관, 즉 정의의 원칙을 시민 불복종의 근거로 삼습니다.

## 261-2, 261-3

롤스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차등의 원칙을 위반하는 법은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차등의 원칙을 위반하는 법이 동시에 평등한 자유의 원칙 혹은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다면, 그 법은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일반적으로는 차등의 원칙을 위반하는 법이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차등의

원칙을 위반하는 법이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 26 수능완성 59쪽 6번 문항

롤스 제시문 : 어떤 소수자에게 투표나 직책을 맡을 권리 혹은 재산을 소유하고 이전할 권리가 거절된다면 이런 부정의에 대해 불복종할 수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차등의 원칙의 위반은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이 기본적인 평등한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 시민 불복종에 의해 거부되어서는 안 된다.

#### 261-4

롤스는 어떤 법이 차등의 원칙에 근거하는 동시에 그것이 평등한 자유의 원칙 혹은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다면 해당 법은 물론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 261-5

롤스는 차등의 원칙에 근거하지 않은 법이 평등한 자유의 원칙 혹은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을 심각하게 위배하고 있지 않다면 물론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볼 것입니다.

#### 261-6

롤스에 따르면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되는 부정의, 즉 평등한 자유의 원칙 혹은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에 대한 심각한 위반은, 차등의 원칙에 부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 261-7, 261-8

롤스에 따르면 차등의 원칙을 비롯한 모든 정의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시민 불복종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61-9

롤스는 차등의 원칙에 대한 위반 자체는 시민 불복종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 261-10

롤스는 차등의 원칙에 부합하는 법일지라도 그것이 평등한 자유의 원칙 혹은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다면 해당 법은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 262-2

롤스에 따르면 차등의 원칙을 위반하는 법도 간접적 시민 불복종을 하기 위한 의도적 위반의 수단은 될 수 있습니다. 260-7 해설 참고

#### 262-4

롤스에 따르면 최소 수혜자의 최대 이익을 보장하지 않는 법이 동시에 평등한 자유의 원칙 혹은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면, 해당 법은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262-5

롤스에 따르면 시민 불복종의 결과로 평등한 자유의 원칙 혹은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에 대한 반영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동시에 차등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방향일 수 있습니다. 역시나 그것도 알 수 없는 일입니다.

#### 262-6

롤스에 따르면 차등의 원칙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최소 수혜자들 역시 다수의 정의관에 근거하여 합당한 항거를 한다면, 그 행위는 시민 불복종이 될 수 있습니다.

#### 262-7

롤스에 따르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 않더라도 그 법이 평등한 자유의 원칙 혹은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지 않다면, 해당 법은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262-8

롤스는 차등의 원칙을 비롯한 정의의 원칙에 대한 불법적 항거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봅니다.

## 262-10

롤스에 따르면 거의 정의로운 사회는 차등의 원칙을 비롯한 정의의 원칙이 확립되어 있고, 정의의 원칙에 따라 규제되고 있는 사회입니다.

## 263-1

롤스와 싱어는 모두 정의롭지 못한 법에 대해 즉각적으로 시민 불복종을 할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개정 수단을 먼저 고려해 보고 시민 불복종은 최후의 수단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해당 선지의 경우 싱어의 입장에서 정의롭지 못한 법에 대해 즉각적인 시민 불복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 263-3

롤스는 불완전한 절차적 정의를 주장하며, 다수결의 원칙도 정의로운 법의 제정을 완전히 보장해 줄 수 없는 불완전한 법 제정 절차라고 주장합니다.

## 263-4

257-9 해설 참고

## 263-5

싱어는 다수의 진정한 결정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극심하게 부정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해당 선지의

경우 싱어의 입장에서 다수가 지지하는 법이 시민 불복종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 26 수능완성 60쪽 8번 문항

ㄷ. 싱어: 다수가 지지하는 법이라고 하더라도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있다. (O)

## 263-7

롤스에 따르면 법의 정의로움을 판단할 수 있는 독립적 기준은 존재하지만(정의의 원칙 부합 여부가 바로 법의 정의로움을 판단할 수 있는 독립적 기준입니다) 정의로운 법의 제정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완전한 법 제정 절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바로 그렇기 때문에 시민 불복종이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 263-8

롤스에 따르면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법을 제정하는 것은 효율적일 수는 있지만 언제나 올바른 결과만을 도출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선지의 경우 롤스의 입장에서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법을 제정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없다는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263-3 해설 참고

## 263-10

싱어와 롤스 모두 시민 불복종이 위법 행위라는 점에서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심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해당 선지의 경우 ‘싱어와 달리’라는 말이 잘못되었습니다.

### 26 수능완성 정답과 해설 39쪽 17번 문항

ㄱ. 싱어와 롤스는 모두 시민 불복종이 법에 대한 존중심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싱어와 롤스 모두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 264-2

싱어는 민주주의 원칙이 확립된 사회일수록 시민 불

복종의 정당화는 쉬워진다고 봅니다.

**26 수능완성 116쪽 17번 문항**

싱어 제시문 中 : 시민 불복종은 결과주의적 관점에 의해 정당화되며, 민주주의 원칙이 확립된 나라일수록 더 쉽게 정당화된다.

**25 6월 모의평가 14번 문항**

ㄷ. 싱어 : 법에 대한 존중이 강한 민주 사회일수록 시민 불복종이 옹호될 가능성이 높은가? (O)

롤스는 심각한 부정의에 대한 모든 저항이 다수의 정의관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개인의 양심에 따라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분명한 사실은, 개인의 양심에 따라 심각한 부정의에 대해 저항할 경우, 그것은 ‘시민 불복종이 아니라’ ‘양심적 거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26 수능완성 57쪽 2번 문항**

롤스 제시문 中 : 시민 불복종이 공통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정의관에 대한 호소인 데 반해, 양심적 거부는 공동체의 신념에 호소하는 행위가 아니며 다른 근거를 가질 수 있다.

**264-3**

롤스는 시민 불복종이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동시에, 법의 경계선(테두리) 밖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라고 봅니다.

**264-5**

롤스에 따르면 거의 정의로운 사회는 체제, 기본 구조, 헌법은 전반적으로 정의롭지만, 가끔 심각하게 부정의한 법, 제도, 정책이 제정되기도 하는 사회입니다.

**264-6**

롤스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에 대한 정당한 시민 불복종이 성립하려면 다수의 종교적 교설이 아닌 다수의 정의관에 근거해야 한다고 봅니다.

**264-7, 264-8**

롤스에 따르면 개인적인 도덕 원리나 종교적 교설이 정당한 시민 불복종을 ‘지지’하거나 정당한 시민 불복종과 ‘일치’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도덕 원리나 종교적 교설이 결코 시민 불복종의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롤스의 입장에서 시민 불복종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다수의 정의관(정의의 원칙, 사회적 협동의 기본 원리)뿐입니다.

**264-9**

**265-1**

252-2 해설 참고

**265-2, 265-3, 265-5**

263-3 해설 참고

**265-4**

롤스는 시민 불복종이 정의로운 입헌 체제를 안정시키는 방도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해당 선지의 경우 ‘롤스와 달리’라는 말이 잘못되었습니다. 255-10 해설 참고

**265-6**

256-1 해설 참고, 260-2 해설 참고